

보도시점:

2024. 3. 21.(목) 14:00

배포:

2024. 3. 21.(목) 14:00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출범 이후 첫 회의

- 올해 1월 유철환 위원장 주재 조정회의 조정 합의안 후속 조치
- 포항 '장기면'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 군(軍) 사격훈련 등 협의 시작

□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피해를 받아온 장기면 주민들을 위해 피해지원 대책과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민·관·군 협의체가 첫발을 내딛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제1사단, 경상북도, 포항시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관·군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체는 장기면 등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사업과 군(軍) 사격훈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 포항 수성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주민 2,803명은 지난 2021년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년간의 조사·논의 끝에 올해 1월 30일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조정·합의한 바 있다.

협의체는 우선 주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제1사단, 경상북도, 포항시를 대상으로 구성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기관을 추가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 오늘 회의에는 주민대표, 국방부 정책기획관,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해병대 제1사단 작전부사단장,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포항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조정 이후 기관별 이행상황 확인, 협의체 활동 계획 등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협의체는 다음 달 1일부터 주민, 경상북도 및 포항시가 제출한 사업안 추진방안과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 재개여부, 소음감소와 피해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민·관·군 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장기면 지역이 발전되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방보훈민원과	책임자	과 장	윤영국 (044-200-7361)
		담당자	사무관	김문영 (044-200-7366)

